

마을공동체 학술세미나

서울의 마을공동체는 무엇이고,
어디를 지향하여야 하는가?

일시 | 2012.4.30. 14:00~15:40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대강당

주최 | 서울특별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마을공동체 학술세미나 안내

서울의 마을공동체는 무엇이고, 어디를 지향하여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개발과 압축성장을 이루었으나 우리 사회는 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과 소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고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중점시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마을의 의미와 가치, 마을공동체 회복사례 등 마을공동체를 위한 철학과 방법론 논의를 통해, 서울에 적합한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바람직한 공동체 회복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14:00~14:05	개회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4:05~14:10	인사말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14:10~14:50	주제발표1	후기 근대적 마을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에 주목하는가? - 마을공동체를 위한 철학과 방법론 조한혜정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
	주제발표2	우리 이웃들의 삶터 일구기 - 마을공동체 사례와 경험을 통해 본 서울의 방향 정외영 이사 녹색마을사람들
	토론	좌장 김영욱 교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태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선기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웅규 교수 중앙대학교 건축도시디자인학과 교수 이 호 소장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질의답변	

일시 | 2012년 4월 30일 14:00~15:40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대강당
주최 | 서울특별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후기 근대적 마을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에 주목 하는가?

마을공동체를 위한 철학과 방법론

조한혜정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

후기 근대적 '마을'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에 주목하는가?

-마을 공동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방법-

프롤로그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아이들은 내버려있거나 가두어져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짓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사람 살기에 좋은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돈이 된다고 아파트로 몰려갑니다.
아이들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집에 돈을 넣는 만큼
집안은 가난해지고
아이들은 피폐해 집니다.
집은 많아지고 나라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는데
왜 사람들은 왜 점점 가난해지고 아이들은 불행할까요?

오로지 부자가 되고 싶은 나라는 토건 사업에 몰두합니다. 도로를 닦고 집을 짓다가 경제 위기가 와도 아파트를 짓고 계속 신도시를 만듭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거 공간은 곧 슬럼가로 만들어버릴 듯 새 아파트들을 짓습니다. 아파트 값이 치솟자 아파트는 잘 팔리는 상품이 되어 가족은 계속 이사를 갑니다. 골목에서 밤늦게 놀던 아이들도, 안전한 마을을 일구는 주민도, 추억거리를 나눌 친구도 없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기억'도 사라진 시대가 와 버렸습니다. 조만간 슬럼지역이 될 아파트 빌딩 숲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돌봄 노동과 찰나적 행복들이 만발합니다. 점점 아기들은 태어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은 입시 노동으로 시들시들 해졌고 어른들은 설 새 없이 일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청년들은 일이 없어 학교와 학원만 다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욱 설 새 없이 일만 합니다. 어느 듯 그 부모들은 자식이 돈 먹는 기계라고 말하며 독립을 하라고 구박합니다. 모두가 돌봄이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돌봄을 버거워하고 외톨이로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난감한 현실입니다. 모두가 오로지 자기 삶의 주인이어야 하고 남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멋지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개별적 공간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건국가의 병은 이런 식으로 터져 나왔고 그 병은 매우 깊습니다. 소통 부재와 사회, 돌봄 결핍의 시대를 낮게 할 명약이 있을까요?

“돈 버는 것과 보살피는 것, 지역 운동과 정치 참여, 그 외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상호 시너지를 내는 통합된 사회를 상상해보라. 재미있게 놀 시간도 있다고 상정해보자. 그런 미래는 금방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탈산업사회로 이동하는 시대에 성 평등을 실현해낼 유일한 모델이다. 그 비전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민주적 세상을 꿈꾸기는 힘들 것이다.” 낸시 프레이저 (1997: 62)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것과 보살피는 것, 지역운동과 정치 참여, 그 외 다양한 시민활동이 상호 시너지를 내는 삶, 배움이 즐거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소모성 건전지가 아닌 재충전의 삶,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과 숫자와 하드웨어로 풀어내는 삶이 아니라 상호 호혜와 지혜로운 이야기와 축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돈을 만드는 카지노 경제가 아니라 필요한 물자들이 순환되는 사회경제, 삶이 녹아 있는 단골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자독식의 싸움판이 아니라 측은지심이 살아 있는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나누면서 배려와 돌봄이 순환되는 마을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도구화해 온 그간의 '토건국가'적 개발 논리를 벗어나 돌봄과 보살핌의 원리가 살려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보살펴지는 곳, 환경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주민회의가 수시로 열리는 곳, 솜씨 좋은 이웃집 주부가 하는 반찬가게와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목공방과 철공소, 그리고 텃밭이 있는 곳. 마을 주민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상호 호혜의 공간, 단골이 있어 마음 든든한 곳, 절기마다 이웃들과 삼삼오오 모여 놀고, 세대에 걸쳐 마을 축제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조출한 돌잔치에 참여한 이웃이 대모와 대부가 되는 곳, 학교 운동회에 마을 주민 모두가 참가해서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부르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집을 수리하는 곳, 함께 에너지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구환경을 더 이상 망치지 않는 곳, 그런 건강한 삶의 장소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은 자주 둥글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협약을 만드는 원탁회의의 자리, 그리고 갖가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필요에 의해 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지혜롭고 강건해집니다. 이런 '마을적인 삶'이 정착할 때 승자독식 사회도, 카지노 자본주의도 발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마을에서 시작하는 단골경제는 협동경제와 사회경제로 이어지면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낼 테니까요. 무한 성장주의의 신화를 넘어서는 '희망의 땅,' 그 곳은 바로 여기 나/우리의 일상이 펼쳐지는 곳, 나/우리가 먹고 자고 노는 터, 나/우리가 만들어가는 마을입니다.

후기근대적 마을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에 주목 하는가?

-마을공동체를 위한 철학과 방법론-

조한 혜정(연세대. 문화인류학)

2012년 4월 30일 발표문

난감한 상황

- 1) 시장의 실패 : 글로벌 승자독식 자본주의
- 2) 국가의 실패 : 분배정의 실종 (1:99) 돌봄결핍사회
- 3) 시민사회의 실패 : 피로사회의 고립된 성과주체

“부유하는 개인, 소멸하는 열정”
지속 불가능한 생태계와 에너지 위기
‘생활세계의 식민화’ (무연사회, 초합리적 바보)

“경쟁과 적대에서 우정과 환대로”
합리적 해법은 없다 - ‘진화’상의 패러다임 전환기



THE
LIMITS
TO
GROWTH
THE
30
YEAR
UPDATE

“세계가 다시 『성장의 한계』를 읽어야 할 때다!”
1972년에 던져진 메시지는 지금의 현실과 더욱 부합하며 적절하다.

성장의한계

도널드 H. 메도즈 48-46, L. 메도즈 요르겐 만다스 지음 | 강병순 옮김

『성서』 『지본론』 『종의 기원』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기념비적 저서,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Un des films les plus excitants de l'année" **PREMIERE**

NICOLAS CAGE



JARED LETO

ET ETHAN HAWKE

LORD of WAR

Vendre des armes est un business comme un autre.

UN FILM D'ANDREW NICCOL

Produit par Andrew Niccol et Nicolas Cage. Révisé par Andrew Niccol. Scénario de Andrew Niccol et Nicolas Cage. Musique de John Williams. Montage de Andrew Niccol. Directeur de la photographie de John Williams. Distribution par Paramount Pictures. Tous droits réservés. © 2005 Paramount Pictures. Tous droits réservés. © 2005 Paramount Pictures. Tous droits réservés. © 2005 Paramount Pictures.



From <http://occupywallst.org>





壓縮的 近代
compressed modernity

‘마을’이 사라진 거대 도시 서울

1) 한국의 근대화와 삶의 시공간

승자독식 카지노 자본주의
“노동하는 동물”이 주도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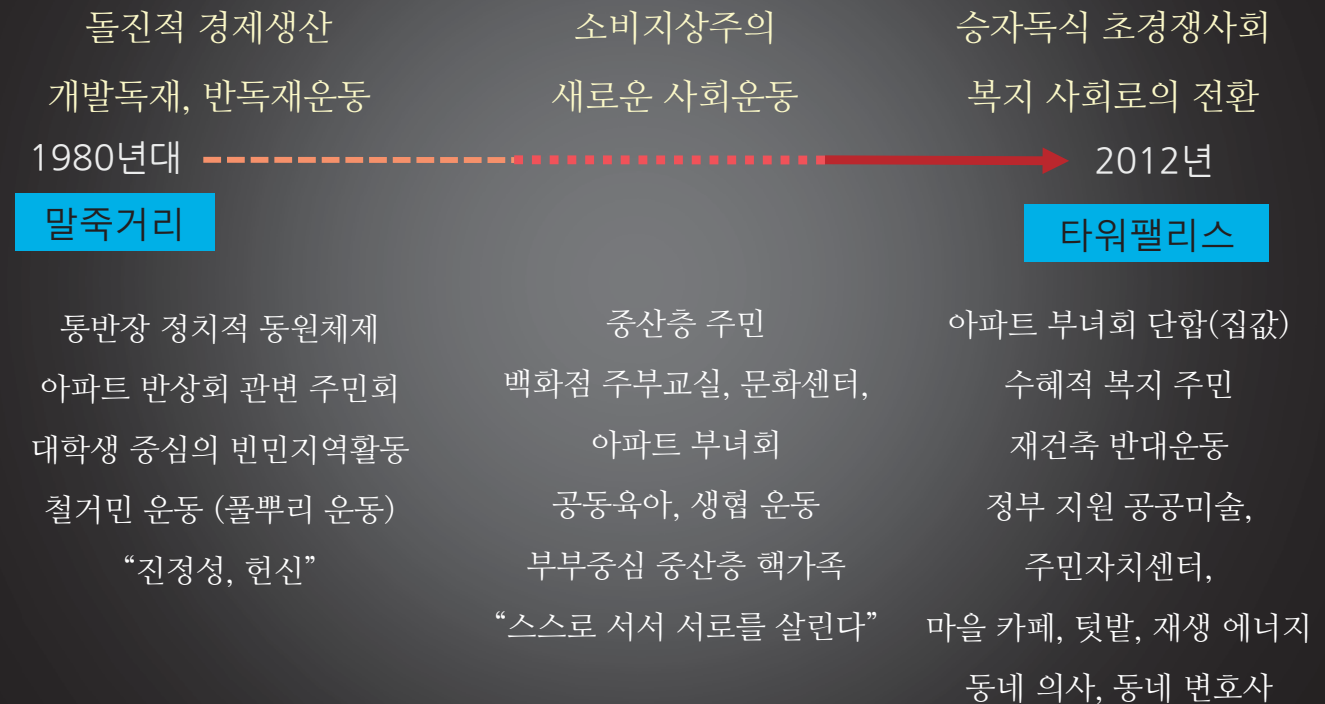
도구적 가족
입시 공화국과 경영 모성
“지면 끝장이다”
돌봄 결핍 사회

근대적 삶의 공간

토건 국가: 하드 웨어사회
(아파트 공화국, 투기 광풍)
잡은 이사, ‘골목’과 관계 실종

2) 그래도 마을이 있고 주민도 있다?

초고속 압축 성장과 불균형 발전 와중에 생긴 다양한 층위의 주민들



3) 후기 근대적 마을 만들기: ‘맹아’들을 엮어내기

비전: 지속가능성 혁명: Transition Town(재생 에너지)

‘소통회복’ (원탁회의)과 자활노동, 단골 경제를 통한

‘생기 있는 삶’을 위한 생태계 회복

自助(자조) 共助(공조) 公助(공조)의 건강한 사이클



▲ 박미현 동네부엌 대표와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장금' '돌재 언니' (원복부터)가 가게에서 팔락 웃고 있다.

4) 도전 과제 하나: “작은 사례들만 있고 큰 그림은 없다”

배움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큰 그림 그리기

‘경험의 죽음’ 이 아닌 경험의 소생 (localization)

경험이 공유되고 ‘이론화’ 되는 원탁 회의들 (탈식민)

대대적인 시민 학습과 공유 미디어의 중요성(방송국)



도전 과제 둘: 다양성의 조직화 (Multitude)

“동기는 달라도 풀 문제와 방식은 같다”

다양한 경험을 되살리고 조율되는

‘창조적 공공지대’ creative commons

새로운 지역 활동가= 회의 기획+ 현장
관찰자 + 네트워크+ 집단 치유적 능력

협동: 풀뿌리 운동가+ 후기 근대적 ‘전
문가 + 행정 공무원의 협력

+ Procariat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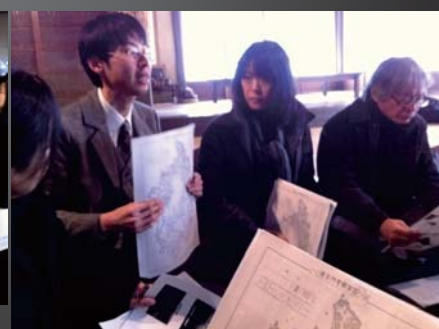
(CC) Swamibu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의 자리!



도전 과제 3: 새로운 관민 협력의 기틀 마련

- 도구적 합리성, 숫자와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업
- ‘프렉탈’ 시대의 새로운 세포 (씩) 생성의 가능성을 평가함: 시혜가 아닌 호혜, 기적, 감동, 시너지 효과, 활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스스로 만들어낼 탁월함 (예:골목길의 아이들, 마을 축제와 시장, 타운 홀 미팅, 단골 경제 등을 짚 수 있는 지표)
- 현장 공무원 제도의 도입: “별난 놈들의 모임”- 시민과 활동하는 신종 공무원의 등장 (일본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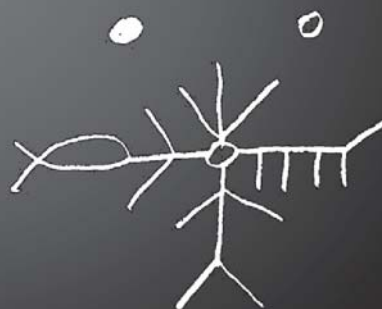


가장 위험한 사람: 혼자 기획하고 매뉴얼 만드는 사람
 개발독재의 몸 + 근대 기획자적 주체 + '피로사회'의 성과적 주체
 마을 일꾼: '하고 싶은 일'보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결핍을 네트워크로 메운다 Network of Excellence

마을 =우정과 환대의 장소
 길고 느린 시선으로 내/우리 삶을 재편하는 것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내 친구의 단골집은 어디?”
 “내가 돌보는 사람들, 내 장례식에 와서 슬퍼할 이들은?”



우리 이웃들의 삶터 일구기

마을공동체 사례와 경험을 통해 본 서울의 방향

정외영 이사
녹색마을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삶터 일구기

(사)녹색마을사람들 사례를 중심으로

정외영 녹색마을사람들 이사

활동과정 1

머리를 맞대고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다

- 수다, 찻상 앞에 모여들다
 - 나를 애태우는 삶의 문제들
- 수다, 목표를 만나다
 - '나' 의 문제, '우리' 의 문제

활동과정 2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공유하고,
목표를 공감하다.

-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은
 -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일구어가는 **따뜻한 마을**,
 - 되살림과 친환경활동으로 열어가는 **지속 가능한 마을**,
 - 지역주민 지도력 강화를 통한 **역량 있는 마을**

‘따뜻한 마을’ 일구기

- 내 아이가 잘 크려면 이웃 아이가 잘 커야 합니다!
 - 아주 특별한 **‘열린 숙제방’**
- 이야기가 필요한 마을 아이들이 있어요!
 - 아이들의 꿈을 품어내는 **‘이야기 엄마들’**
-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 골목을 누비는 **‘이웃산타와 루돌프’**
- 이웃의 잔소리가 응원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 잔소리에도 노하우가 필요한 **‘사랑의 책 배달부’**

‘지속 가능한 마을’ 일구기

- 아까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 ‘녹색가게’ 가 딱이야!
- 똑같은 녹색가게가 아니었으면...
 - 마을 공동 되살림 작업장 ‘풀빛살림터’
- 마을어른들 모두가 나섭시다!
 - ‘나는 마을환경강사’

‘역량 있는 마을’ 일구기

- 실천활동과 연관된 학습 동아리 활동
 - 우리는 지금 ‘열공’ 중!
- 스스로 선택하는 기여
 - 회비는 얼마로 할까요?
- 지속 가능성을 향한 지도력 세우기
 - 난 아니야, 난 못해!

활동과정 3

구체적인 역할 나누기, 서로 협력하기

- 각 참여자의 강점과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역할 나눔
 - **이건 할 수 있어!, 어머머, 이건 자기가 딱이네!**
-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협력
 -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식구들!**

활동과정 4

성과의 공유와 각 역할자의 구체적 기여 인정

- 활동의 결과에 대한 신속한 공유와 평가를 통해 각 역할자의 기여 인정
 - **참말로 보물이네!**
- 상호 협력의 결과를 통한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협력에 대한 믿음 강화
 - **아이들의 눈부신 웃음!, 그 겨울의 찻집**

활동전략 1

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자

- 참여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기회,
또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능력을 발견할 기회,
나아가 성장하는 기회를 경험하자
 - 내가 잘 나가는 이유, 살아있는 꿈
- 지지와 지원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북돋우자

활동전략 2

‘성공’하는 경험으로 자신감을 키우자

- 함께 도모하고, 함께 성취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 나, 이 동네 주민이거든요!, 웨딩홀을 접수하라
- ‘작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의욕, 시도하고자 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강화하자
 - 일단 해보자는 대책 없는 자신감!
- 성과를 공유하고, 각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부심을 높이자
 - 낮은 목소리에 실리는 힘!, 작은 바위 얼굴

활동전략 3

협력적인 문제해결방식을 구조화하자

- 동아리, 소모임 방식의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활동방식을 강화하자
 -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내는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하고 구조화하자

활동전략 4

권한과 책임 나누기를 통해 주도성과 자율성을 높이자

- 참여하는 활동의 대표성을 갖는 기회를 나누자
 - 팀장이 되었어요! 활동소개를 하라네요!
-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자
 - 그냥 활동만 할 때는 몰랐어요, 이런 사정인지...

활동전략 5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지도력을 발굴하고 강화하자

- 차세대 지도자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조직적 목표를 공유하자
 - 삼인삼색, 지도자 이야기
- 서로의 성장과 훈련을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자

활동전략 6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열정과 의지를 높이자

-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 살아가는데 힘이 됩니다!
- 활동을 통해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 입 밖으로 크게 외치는 비전!

활동목적

- 삶터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
- 협력적인 문제해결방식을 확산한다
- 주민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비전

이웃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구어가는

따뜻하고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삶터 공동체

우리들의 믿음

- 우리 이웃들은 자신의 삶을 좀 더 우호적이고 협력적으로 변화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다
-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 생활에서 다져온 경험과 지혜로, 합의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우리 이웃들은 서로를 잘 도울 수 있다

부록

후기 근대적 위기와 ‘돌봄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 ‘차가운 근대 cold modern’ 에서 ‘따뜻한 근대 warm modern’ 로

조한혜정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

후기 근대적 위기와 ‘돌봄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 ‘차가운 근대 cold modern’ 에서 ‘따뜻한 근대 warm modern’ 로

조한 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¹⁾

“돈 버는 것과 보살피는 것, 지역 운동과 정치 참여, 그 외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상호 시너지를 내는 통합된 사회를 상상해보라. 재미있게 놀 시간도 있다고 상정해보자. 그런 미래는 금방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탈산업사회로 이동하는 시대에 성 평등을 실현해낼 유일한 모델이다. 그 비전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민주적 세상을 꿈꾸기는 힘들 것이다.” 낸시 프레이저 (1997: 62)

“만일 당신이 끈기가 있고 장시간 일하는 것에 그리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며,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마련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일을 해보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내가 늘 원하던 그런 일이거든요.”- 노인과, 자녀 있는 장애인 집에 찾아가 그들을 보살피는 직업을 가진 한 핀란드 여성의 말(Leila Sinonen and A Kovalainen 1998: 229)

1. 들어가는 글 : 여성 정책 10년을 통해보는 한국 근대화와 국가 정책

전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고 모든 국가들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편입되면서, 그간 존재해왔던 여러 수준의 공동체 기반이 급격하게 붕괴해가고 있다. 20세기 후반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국에서 시작한 신자유주의 물결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모토로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재의 최소화,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를 추진했으며,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바람이 일고 있다.

한국은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 앞장서서 신자유주의적 변신을 꾀한 국가에 속한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경제 불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전 국토를 ‘개발 공사장’으로 만들면서 사회공동체적 기반을 삼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과거에 교육, 정치, 시민사회 활동에 바쳐진 시간과 에너지는 유흥산업으로 흡수되고 많은 공공의 노력에 의한 공동체적 시도들은 무력화되고 있다. 급격한 글로벌리제이션의 와중에서 국가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은 글로벌 자본과 긴밀하게 결탁할 수밖에 없는 시장 제일주의가 강조되면서 국가의 중요성은 다시 증가하

1) 이 연구는 2004년 여성부 지원에 의한 [성인지 전략 기획 연구]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여성부 연구 보고서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전환]에 “여성정책의 ‘실질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사회를 재편한다.”는 제목으로 실렸던 원고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고 있고, 국가 정책은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여타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마당이어서 더욱 국가가 가진 자원과 정책의 의미가 커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사회과학자들이 사회 정책에 부쩍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서 ‘여성정책’에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수립되기 시작한 한국의 여성정책과 여성부 신설이 근대국가의 성숙과정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통해 다양한 국민주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고, 사회 전체에 “남성적/도구적 합리성”의 원리만이 아니라 “여성적/소통적 합리성”의 원리가 균형 있게 활성화될 때 한국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여성정책의 수립과 실현은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재는 하나의 주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여성정책 10년의 혼선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 정책은 괄목한 성장을 보여 왔고 그 정책의 기저도 크게 바뀌었다. 이전의 여성 정책이 여성을 약자 집단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특별히 지원하여 국가 발전에서의 온전한 국민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발전 속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관점을 정책적 토대로 하였다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변화시키면서 ‘발전’ 개념 자체의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관점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여성정책은 ‘동일한 국민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을 만들고 그들을 연대’하게 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기저로, 남성과 여성 모두 대상이 되고 가정과 공공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차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이는 사회와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비약적 전환을 의미하고, 이 면에서 한국의 여성정책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매우 선진적이다.

그러면 성별화 되어 있는 가정/공공 영역을 성인지적 정책을 통해 바꾸어내려는 ‘성 주류화’의 움직임은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가?²⁾ 허라금(2005)은 그간의 정책이 사실상 여성의 공적 영역 진입을 지향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음을 지적하였고, 김영옥(2004)은 현장에서 지난 10년간의 실행 과정을 거치면서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회의와 우려의 목소리들이 무성하게 일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현장의 여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 주류화 전략의 실천적 공감대를 시급히 찾아내야 한다”, “제도적 장치를 실현한 것은 대단한 성과이지만 막상 성 인지적 전략은 걸음마 수준이다”, “여성정책 다양화와 역할 평가제 도입이 절실하다”, “역차별 대응 개발 시급하다”³⁾는 논의들이 오

2)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김양희, 2004: 5 재인용, UN/DAW/ECLAC, 경제사회이사회 1998)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성 주류화’는 1995년 세계 여성 대회(북경)에서 공식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원리로, 성인지적 관점을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현한다는 개념이다. 사회에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성별 위계 원리를 민감하게 읽어내고 수정해감으로써 남녀가 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Corner, 1999; Rees, 1999; 김승경, 2004: 128).

가고 있고, 실무자와 여성정책 관련 공무원 및 연구자들이 모인 워크숍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⁴⁾

10년 동안 여성정책의 실현을 위해 뛰었던 이들은 “성 주류화의 도입이 너무 이상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소수자’이자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향상시키는 ‘여성과 발전’(Women in Development)식 접근이 아직 한국 실정에는 더 적합하며, 성 평등적 관점을 통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겠다는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적 접근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모든 영역에 성 인지 정책을 펼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며, 여성들이 모든 주요 의사결정 단위에 들어가서 제대로 활동하게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충분한 인력풀이 없는 상황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밀고 가는 것은 무리하다는 평가이다.

두 번째로 이들 현장 공무원과 활동가들은 “지배적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일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여성부가 남성 중심적 조직에서 살아남기에는 한국 사회의 정책구조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남자가 없으면 아주 작은 일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부장적 구조가 끈질기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예산과 인력을 포함한 자원 면에서도 뒷받침이 없고, 그것을 따내는 게임의 룰을 익히는 데만 해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위 조직에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려고도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현재 각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새 세대 여성들은 ‘배려의 분위기’에 거부반응을 드러내는 ‘솔로 플레이어’들로 성장하여서 조직 변화를 이끌어낼 의지나 전문성, 그리고 헌신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세 번째로 이들은 반동적인 여론과 선정적인 대중매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잘못된 매체에 의한 여론화가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 폐지 등과 관련하여 ‘여성 이기주의’라거나 ‘역차별’ 등 반발이 심한 상태라는 것이다. 때때로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비난과 음모론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대중적인 지지를 얻으려면 홍보와 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를 기울여야 하며, 설득의 논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여성정책 담당관 제도가 주어져 있지만 막상 조정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런 면에서 현 정권이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일관되게 여성정책을 실현해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하고 있었다.

3) 함영이 기자, 우먼 타임스 2004년 12월 7일자. [북경+10 이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성 정책 전문가들의 포럼을 소개함.

4) [한국 양성 평등 정책의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성 공무원 실무자들과의 워크숍이 2004년 11월 8일에 여성 개발원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여성부 정책연구회 회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의 현장에서의 고민이 공유되었다.

네 번째로 이들이 지적하는 비판은 정책 수행의 “평가 작업”의 문제였다. 참여정부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정부는 ‘계량화’를 고수하고 있고, 결과 중심, 수치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영역에 있던 이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관료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지, 정부와 관료체제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표준화와 객관적 지표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개혁적 사례를 인큐베이팅하고 모델 개발을 해야 하는 경우, 계량화를 통한 평가는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계량화한 자료와 기준에 인정되는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면 여성계나 청소년계 등 혁신적인 일을 추진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측정 방식이 나와야 하며, 일정 기간만이라도 여성 관련 정책은 다른 평가 방식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더욱 통계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수치에 대한 집착은 사실상 기존의 무능한 행정의 행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화 하면서 ‘실적’에 대한 집착에서 더욱 강화된 현실이다. 이런 면에서 가장 ‘개혁적’이고자 하는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물결을 타면서 가장 보수적인 관행에 충실한 모순적 현실을 보게 된다.

위의 논의에서처럼 현장 실무자들은 문제 상황을 상당히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 정책이란 장기적 전망을 가진 것이고, 현재 여성정책 관련자들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타부처의 변화에 비해 너무 선진적인 것이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향해가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공무원들에게는 여성 정책이 오히려 현실적이지도, ‘선진적’이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여성, 민생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생’이라는 범주에는 그간 토건적 국가를 만들어온 남성 노동자만 있지 여성 노동자는 없다. 40만개의 일자리, 곧 ‘공사판’을 만들어내면 정말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 위의 발상을 한 정책 입안자들은 “그간 수고한 남자 국민들을 이제는 좀 쉬게 하자. 그간 충분히 열과 성을 다 하였으므로 이제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재충전을 하게하고, 그간 비공식 영역에서 능력을 길러온 주부들의 돌봄의 능력을 서비스 산업과 공공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내보도록 하자”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까? “지금 사회에 필요한 노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내고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지식 기반사회의 생산성을 올리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았을까? 살기 좋은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내는 것, 질 높은 삶을 통해 만들어진 교육, 문화, 놀이와 관광산업이 대단한 경제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 머릿속에 있는 때 비로소 노동정책, 경제 정책, 복지 정책, 그리고 여성 정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여성정책이 표류하는 것은 속도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급격한 신자유주의 질서로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일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정책이 강조해온 ‘성 주류화’ 노력, 곧 다양한 국민들을 살려내는 정책은 미처 발전론을 벗어나지 못한 행정체제와 부딪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생산성’에 대한 현 정부의 통계와 숫자 게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만 것이다. 그간 ‘물적 건설공사’에 치중해온 것을 ‘문화적 건설공사’로 균형을 맞추어 가야한다는 점은 누누이 지적되어왔다. 급격한 전환이 어렵다면 점진적으로라도 소프트웨어 생산에 투자를 늘려가야 할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려 할 즈음에 불어 닥친 경제 위기로 인해 다시 한국의 국토는 개발공사판이 되어버리고 있다. 국가 토지 개발 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토건 국가적’ 체제가 지속될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⁵⁾

다음 장에서 여성 정책이 표류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초고속 압축성장이라는 시간성과 연결해서 살펴본 후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위해 돌봄 사회를 향한 상상력을 막아온 반-보살핌의 구조를 국가/노동/가족제도와 연결시켜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는 복지정책을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이른바 북유럽 선진국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빌어 한국 국가 정책의 기저를 어떻게 바꾸어내야 할 지, 그 주체는 누구일지, 마을 논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

2. 압축적 불균형 토건 국가와 돌봄의 위기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동안에 걸쳐 고도 압축적 경제 성장을 하였고, 그로 인해 매우 기형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거쳐 왔다. ‘근대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인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가속화되는 ‘변화의 속도성’을 가지지만, 한국은 근대화의 후발 주자로서 그 중에서도 최고속 변화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근대적 합리화를 해내려는 ‘근대적 프로젝트’와 근대적 질서로부터의 단절을 이루어내려는 ‘탈근대적 프로젝트’가 상호 마찰을 빚고 있고, 성 평등 사회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에 가해지는 갖가지 반발과 저항도 이런 압축적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것들이다 (조혜정, 1999: 303-341). 현재의 불안과 혼란은 여전히 매우 산업사회적인, ‘근대적’인 시선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거나 ‘비동시성의 동시성’ 현상을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사실상 ‘성 주류화’란 일단 주류화 할 사안과 그것을 해낼 세력이 생겼을 때 가능한

5) 근대국가가 끝없는 건설공사를 통해 위기를 관리해온 차원에 대한 논의는 남미와 일본 등지에서 일어났고,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개발 국가’개념을 넘어서 ‘토건 국가’의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홍성태, 2005: 18).

것으로, 사회적 소수집단으로서의 ‘여성’이 그러한 스스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동등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서양의 경우 참정권 획득으로부터 지난한 여성 권리 투쟁의 역사가 있었고, 한국에서의 여성 권리 투쟁은 그에 비해서는 미약하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상당히 대중화된 다양한 여성 해방 운동들이 축적되고 새로운 대안적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려는 ‘성 주류화’ 정책이 입안되었고, 이 기획에는 자신들 또한 가부장적 질서의 피해자임을 알게 되는 ‘성숙한’ 남성들이 여성주의자들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파트너로 동참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반동적인 남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남녀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파트너 남성들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부’를 ‘성 평등부’로 바꾸고 ‘여성정책 담당관’도 ‘성 평등정책 담당관’으로 바꾸자는 일부의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적절한 논의로 보이지만 실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

한국의 여성정책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근본적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크게 네 가지 변수에 의해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서 특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국제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변신의 몸짓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이후 군사정권과 같이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인 경우, 자신들의 정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선진적’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 이후 이른바 민주개혁 정권의 경우, 그러한 민주개혁의 연장선에서 여성 지원 정책을 강조한 면이 있다. 두 번째는 내부의 경제적 조건의 변화이다. 이때는 노동력으로서의 여성 노동 수요에 따른 정책 입안이 이루어졌고 지난 10여년간의 여성정책의 기저는 이 부분에 핵심이 있었다. 세 번째는 국내 정치적 효과인데 표를 의식한 움직임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파위가 강력해지면서 사실상 보수와 개혁을 막론하고 여성정책에 관한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편이다. 네 번째는 페미니즘 운동과의 연결성이다. 1987년 이후의 남녀 고용 평등법 제정, 가족법 개정, 성폭력 특별법 제정, 할당제 도입 등은 여성운동 단체들의 활약의 결과이다. 특히 김대중 정권 이후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 입안은 1980년대 이후 여성들에 의한 여성운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현 정권과 관련하여 네 번째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국 초기부터 우파적 여성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은 1980년대부터 일었고, 그 중에서도 현재 여성정책 영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은 [한국 여성단체 연합]을 중심으로 한 노선이었다, 여성들끼리의 독자적 노선을 가기 보다는 남성들의 변혁 운동에 보조를 맞추는 입장을 취했던 [여성 단체 연합]의 경우, 정권과 적대갈등관계가 아닌 참여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1986년 결성된 [한국 여성단체 연합]은 1988년 대통령 단일 후보지지운동을 하거나 지방 자치 단체 선거 등에서 여성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여성 연대]를 결성하는 등 적극적 정치적 개입을 해온 단체로서 남성적 체제와의 협상력을 길러간 집단에 속한다. 지금까지의 급격한 여성정책 분야의 도약은 여성 민우회를 비롯한 [한국 여성단체 연합] 소속 단체들이 축적해온 역량과 방식, 그리고 한국 여성 개발원 등 각 국비지원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여성 전문가’들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늘어난 ‘여성학 전공자’들의 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가 급격하게 소비사회로 진입하고 여성운동이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서 대중적 운동성은 떨어지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는 포스트 페미니즘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징후들이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여성운동이 표류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여성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불안감은 한국 사회의 급속한 근대화와 관련되어 파악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정도의 문제이지 서양에서도 똑같이 제기되었던 난맥이기도 하다. 바덴과 고어츠(Baden and Goetz 1998)는 성 평등 관련 기구나 자리들이 갑자기 늘어나 페미니스트 관점이 없는 ‘신참자’들이 정책 추진팀에 진입하여 혼선을 빚는 문제, 여성 이슈에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과도한 계량화로 부작용을 낳는 문제, 정책 입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구주의적 설득 논리를 펼치는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나는 그간의 여성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너무 수동적이고 반응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문제는 실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는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일수록, 사회구성원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의 결핍’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획기적인 여성정책, 내지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허라금 2006; Mary Daly and Jane Lewis 2000). 후기 근대의 위기를 돌파할 방향과 방법은 이미 상당히 자명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가적 위기, 구체적으로 가족해체와 저출산, 고령화와 안전망의 파괴, 그리고 교육의 파탄 상황을 돌파할 주체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면서 돌봄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해낼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재편을 위한 근원적 질문과 그 재편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일의 핵심은 지금까지 가정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공식/지하 영역에서 돌봄을 감당해온 이들의 경험을 사회화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그간 공공영역에서만 머물며 ‘도구적 행위’에 몰두했던 이들의 다른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달리 말해, 해체가 한창 진행 중인 후기 근대적 위기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이 나와야하며,

이는 가정 영역 고유의 친밀성과 돌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룰 수 없는 미지불 노동과 일자리 문화에 대한 논의를 그 핵심으로 한다. 이런 논의는 현재적 삶의 주요 제도인 국가와 가족,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보다 선명하게 이해를 전제로 한다.

<국가에 대한 질문: 약한 국가, 강한 민족/강한 남자의 역사와 여성 국민>

자본주의의 대두와 함께 열린 국민국가 시대는 19세기 이후 ‘먹거나 먹히는’ 국가간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적 질서로 이행하였다. 대한민국의 전신인 대한제국과 조선은 그런 세계사적 재편의 와중에 ‘먹히는 편’인 ‘식민지 국가’로 첫 출발을 하게 된다. 사실상 20세기 전반부까지는 국가기구 없이 외국이나 지하조직을 통해 자주 독립 투쟁에 투신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공유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조국’이 대한민국을 대신했다. 그리고 그 상상의 조국, 이념으로서의 조국이 현 국가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 민족주의자들의 투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일제 식민지 상태를 벗어난 ‘대한민국’이라는 ‘독립적 국가’의 형성이 내부 역량의 축적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독립은 세계 대전의 종결에 이은 제국주의적 열강들의 각축 과정에서 주어진 것이었고, 그것도 분단국가의 형태로 성립되었다.

남쪽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자주적 국가’로 독립하게 되는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저항 민족주의 이념은 반공주의 이념으로 대체되고 반공을 국시로 삼은 ‘준 전시체제형’ 국가가 형성되었다.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60년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군부 국가가 들어섰고, 군사 정권은 군사주의적 조직력을 기반으로 마치 전쟁을 치르듯 경제 개발 정책을 진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배고픔에서 탈출하려는 국민들의 욕구와 약소국민으로서의 서러움을 보상받아보려는 민족주의적 욕망이 맞아떨어져 짧은 시일 안에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 시기를 통해 한국의 국가는 시장이나 시민사회적 영역을 압도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는 군사주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여 일상영역까지도 경쟁과 전투적 문화로 만들어버렸다. 이 상황에서 군대에 가는 남성들은 당연히 여성보다 상위를 점하며, 군가산점을 둘러싼 논쟁은 남성 중심의 군사주의적 국가 성격을 잘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막강하던 한국 국가의 권위와 기강을 흔든 것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었다. 1997년

6) 국가와 가족의 주체 형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 “불균형 ‘발전’ 속의 주체 형성: 한국 근대화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1999, 또하나의 문화), 권혁범의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2004, 삼인) 임지현, 이성시 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2004, 휴머니스트) 참조.

외환위기가 안겨준 충격과 그 이후 지속된 교육의 위기, 그리고 구조 조정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게 되었고 국가와 가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금융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산, 노동과 교육시장의 세계화가 국민들로 하여금 그간 신성한 영역이었던 국가의 존재에 회의를 품게 한 것이다. 조국/모국으로부터의 이탈을 최악시하던 것과는 달리 다국적 기업에의 취업을 최우선 목표로 삼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삼성맨’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동시에 고실업의 위협 속에서 이민을 원하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국가를 이탈할 계획을 세우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서구 선진국에서 자녀를 키우겠다는 20세기 이민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가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었던 제도 교육이 붕괴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국가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한편, 글로벌 계급 재편 과정에서 상위 계급에 들고자 하는 새로운 계급적 상승 욕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노동 분업과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는 국가를 상대주의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여성 노동력을 대거 흡수하였고, 노동과 자본의 이동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유목민적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다.

중심부가 붕괴하는 탈근대적 정황이 농후한 시점에서, 중심은 무기력해지고 대신 여성이나 장애인 등 주변부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마련이다. 최근 여러 국가고시나 기업 경영면에서 여성들이 대거 등장하는 경향도 이런 시대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버지니아 울프는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여자에게 조국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국가 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사람일수록 ‘조국’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바꾸어가거나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간 똑똑한 여성들은 국가 경계를 넘어 활동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글로벌 기업이 그들에게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장근본주의가 부상하고 대신 개별 ‘국민국가’의 실패가 역력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성의 바탕은 어디서 찾아지는 것이며, 개별자들의 ‘지속 가능한 생존’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인 것이다.

<가족에 대한 질문 : 가족해체와 저출산, 그리고 돌봄의 상업화>

한편 근대화 과정은 개개 국민들을 ‘국민 교육’을 통해 훈련시켜 ‘군인’과 ‘수출역군’으로 만들어냈다. 한국의 초고속 경제발전도 산업 역군과 그의 아내인 가정주부로 구성된 핵가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돈벌이’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국가와 가족 단위의 목표는 일치하였고, 두 단위는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해갔다. 그리고 이 둘의 접점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기구로서의 제도 교육이었다. 대한민국 국가의 성격은 GNP 1만불 시대로 접어들면서 포스트포디즘, 소비자본주의의 본격화를 통해 또 한 번 변화한다. 긴 제도 교육을 통해 남성들의 영역에 나란히 진출하게 된 ‘여성 국민’들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에 의한 ‘가족’의 변화는 불가피하였다. 가정

영역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여 시장/공공영역으로 나와 있고, 영역에 따라서는 남성에 비하여 사회적 활동을 보다 ‘의욕적이고 신나게’ 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기존의 공공/가정, ‘남성=부양자/여성=돌봄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더 이상 성립되기 어렵다.⁷⁾ 독신여성이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급격하게 늘어난 이혼은 기성 가족의 해체를 드러내는 징후들이다. 한국 사회처럼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근대 국가를 재편했던 경우, 가족의 해체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가는 경기부양과 실업자 구제에 엄청난 예산을 쏟고 있지만 사실 그 못지않게 국가가 손을 써야할 곳은 가족/가정 영역이다. 하드웨어적 ‘건설’만을 보던 국가가 미처 손보지 못한 거대한 돌봄의 영역을 관장해왔던 가족/가정의 해체 앞에서 우리 사회는 사실상 ‘파탄’ 상황에 놓여있다. 공식적으로 가족의 중심은 남자였으나 사실상 가정을 관장하고 지배했던 이들은 여성이었고, 한국 사회는 ‘사회를 지배하는 남자, 가정을 지배하는 여자’라는 두 권력 관계를 형성한 상태이다(조한 혜정, 1999). 이 두 영역의 화해와 균형을 잡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특히 공공영역의 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결혼이나 출산 기피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갈수록 많은 돈이 필요한 육아와 노인 부양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사실상 초집약적 두뇌 노동을 계속 해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가정을 꾸리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다. 경쟁적 시장과 공적 영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성을 불문하고 돌봄의 능력이 퇴화된 상태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가정과 직장에서 초긴장된 일을 해야 하는 취업주부의 경우, 가정은 또 하나의 관리할 일터가 될 뿐이다(Hochschild 2003). 상업화된 사회에서 경제력이 있는 경우는 자녀 양육부터 연로한 부모의 돌봄까지를 돈으로 해결하게 되고, 경제력이 없는 경우는 그 책임을 방기하거나 국가에 떠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노동에 대한 질문: 비정규직과 돌봄 노동, 그리고 성 산업>

국가 경제 정책의 초미의 관심사는 고용에 있고, ‘불안정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⁸⁾ 공식적인 실업률은 3%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안정 고용의 형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비정규직도 2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젊은층 비정규

7) 2003년 여성 경제 참가율은 48.9%이며 기혼이 48.0%, 미혼이 51.7%이다. 양육기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향을 드러내는 여성취업 M자형 곡선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경, “공·사 영역의 변화와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 정책”, 공동 프로젝트에서 재인용)

8) 조성곤 기자는 2004년 11월 통계청의 고용 동향 발표를 보도하면서 공식 실업률은 3%이지만 11월 취업자 중 35.5%가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이며, 18시간 미만 취업자도 계속 늘고 있다고 전한다(한겨레 신문, 2004년 12월 17일자).

직의 증가가 두드러진다.⁹⁾ 노동시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계급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편, 고용불안이 만성화되면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여성 다수가 비정규직에 종사하였다면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계 전체의 현안이 되었다. 정부가 비정규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여성’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산업자본주의 사회가 사회구성원을 소수의 자본가와 중간 경영자, 그리고 노동자로 분리시켜왔다면 현재의 세계화 과정은 이들을 소수의 지식기반 노동을 하는 고소득자와 다수의 유연화 된 노동자로 분리시켜내고 있다(김현미 2001:87). 앞으로 더욱 계급양극화는 심해져서 글로벌 신상류 계급에 속하는 극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취업과 빈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자본의 총애를 받는 극소수의 사람들도 어느 나이에든 버려질 운명이다. 자본이 충분하여 글로벌 계급으로의 신분 이동이 가능한 엘리트층과 신분상승을 위한 사투 끝에 버려질 주변적 엘리트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 실업상태로 시작하여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늘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한 국가의 경계 안에서 살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자아내는 상대적 박탈감과 부정적 에너지는 사회의 붕괴를 재촉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신경을 써야 하는 국민은 누구일까?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은 생산량을 늘리는 동시에 다수 국민들이 지속가능한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평생 고용직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이미 정규직 근로자들을 과보호하는 노동조합의 경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노동과 일에 대해 탈산업사회적 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¹⁰⁾ 파트타임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을 이차적, 주변적, 보조적 노동력으로 규정하고 노동문제를 풀어내려 한다면 경제와 고용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김현미 2001:82). 지금은 ‘평생 고용’이 아닌 ‘평생 학습’의 개념을 축으로 하는 일과 삶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미지불 노동이다. 그간 미지불로 수행해졌던 돌봄 노동을 사회(노동)화 하면서 노동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 자체가 돌봄의 공동체로 전환하면서 일과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 사회의 기반을 닦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 이웃끼리의 노동 품앗이 형태의 교환으로부터 일본의 노인 개호보험과 같

9) 통계청의 2004년 8월 통계에 의하면 전체 임금 노동자의 37.0%가 비정규직이며, 민간 노동연구소의 통계로는 55.9%이다.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증가는 20-30대 고학력층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20대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한다(박순빈, “비정규직 2년새 160만명 급증”, 한겨레 신문, 2004년 11월 5일자).

10) 온라인 정책 소식지 [사회], 2004년 11월 11일자.

은 돌봄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교환이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¹¹⁾

결국 노동의 문제는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의 한 부류로서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친밀성의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서양에서는 다국적 노동자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돌봄 노동의 시장화가 시작되었다면, 한국에서는 근대화 초기부터 돌봄 노동이 가정부, 파출부 등에 의해 대행되고 그 인구는 국가 통계에도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거대한 ‘지하 경제’의 일부가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가사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군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왔으며, 돌봄 사회의 제도화를 논의할 때 이 영역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돌봄 노동의 한 부류로 간주되는 섹슈얼리티 영역에서의 기현상 역시 한국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이성간의 친밀성이 성으로 매개되는 현상이 지나치다 못해 ‘성매매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¹²⁾ 양성간 돌봄 영역의 ‘경제화’의 도가 지나쳐서 최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한국 경제가 망해간다는 식의 논리가 나올 정도이다. 그간 방치되거나 남성 중심으로 부추겨져온 거대한 비공식 영역의 ‘성적 노동’ 차원에 대해 한국 사회가 가진 분석적 언어 수준은 일천하다. 분류되지 않은 노동과 거대한 언더그라운드 경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노동 문제의 핵심 이슈로 떠올라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나는 국가의 정책의 방향은 남성 중심의 체제에 여성을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여성을 배제시켜온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제 국가, 가정, 노동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에 돌입

11) 일본에서 2000년에 시행한 개호보험은 단순한 국가의 시례적 제도가 아닌 시민들에 의한 보험식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일본 페미니스트들은 그것을 21세기형 시민사회의 성숙이 가져온 결과로 보고 있다. 55세 이상 국민이 가입을 하면 개별적 돌봄을 가능케 하는 이 제도의 설립은 구빈 대책의 연장선에 있던 복지 개념을 전환시켜내는 계기가 되었다. 개호 보험에 의해서 전국에 300만인의 요개호자가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서비스 공급시장과 고용시장 양면에서도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가와 지방, 관과 민, 여성과 남성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움직임들에 의해 가능해졌고 앞으로도 그런 협력을 통해 보완될 정책이라고 한다. 더 이상 대규모의 특별 양호 노인 홈을 짓지 않고 개인실 유니트 형, 소규모 다목적 시설을 살아왔던 지역에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주가 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좀 더 합리적인 체제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히구치 게이코, 2004: 15-19).

12) 김현미(2004)는 또한나의 문화 대학 강좌에서 가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폭력과 성애가 버무려진 포르노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그런 기업이 돈을 벌어오는 인터넷 기업이라 하여 인터넷 산업으로 표창을 받으면서 공식화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혜심(“성폭행과 인터넷”, 주간 조선 시론, 82쪽, 2004년 12월 23일자)은 2004년 12월 밀양에서 벌어진 고교생 성폭행 사건에 주목하면서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싶거나 여성들의 자발적 쾌락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이미지를 계속 주입하며 특히 성애와 폭력을 연결시키는 포르노 산업과 왜곡된 남성 중심의 성문화를 공론장으로 끌어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선주(한겨레 신문, 2004년 12월 16일자)는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의에서 보여지는 불감증과 위선에 대해 “5분 만에 끝내는 성관계를 부추기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두식은 좀 더 포괄적 의미에서 “성차별 없는 세상을 구경도 못 해본, 작동 불능의 성차별 감지장치 소유자들을 위한 마초 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겨레 신문, 2004년 11월 3일자) 추진오는 성매매는 취향이 아니라 폭력이며 성매매 남성 공화국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썼다(여성신문, “성매매 남성공화국 바꾸어나가야”, 2004년 11월 26일자).

하였다.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인가? 한편에서 ‘경제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면, 동시에 가정과 관련된 쪽에서는 ‘돌봄의 공백’ 내지 ‘돌봄의 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이루어내야 할 때이다. ‘돌봄 결핍증’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남녀 모두가 공공영역의 시민이자 돌봄의 대상과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지고 있다. 기술주도적인 ‘차가운 근대’(cold modern)를 어떻게 상호 소통과 돌봄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근대’(warm modern)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문제를 본격적인 사회과학의 의제로 삼아야하며, 이때 국가, 가족, 노동 개념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¹³⁾

3. “따뜻한 근대” ‘돌봄 사회’로의 정책적 전환을 위한 우선 과제들

그러면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시급한 과제들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간 돌봄 개념을 정교화해온 그간의 여성주의자들의 논의를 통해 찾아보려 한다.

먼저 ‘돌봄’을 ‘잔여적’, 또는 ‘특수적인’ 복지 정책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지난 10여년간 여성과 돌봄에 관한 논의가 일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은 대부분 여성의 노동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표 아래 실시되었다 (허라금 2005). 예를 들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방안”이 정부에서는 주요한 핵심어였으며, 구체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돌보는 어린 아이들의 ‘보육’을 지원하는 보육정책, 그리고 증가하는 고령자들을 돌보는 수요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돌봄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장혜경 2005). 서양의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적 돌봄’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런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복지국가 개념에서 제시했던 분석범주의 한계를 지적해왔다.¹⁴⁾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돌봄’을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무능력한 이들이나 경쟁에서 실패한 이들을 위한, 곧 특별한 집단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지탱될 수 없으며, 그런 면에서 ‘돌봄’에 대한 근본적 인식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돌봄’을 정치적 활동이기에는 너무 본능적이라고 본 아리스

13) 호쉬차일드(Hochschild, 1995)는 자녀 양육의 행태를 관찰하여 이를 ‘전통/탈근대/차가운 근대/따뜻한 근대’라는 네 범주로 나누어 논하는 한편 따뜻한 근대의 이상을 향해갈 것을 제안한다. 이 ‘따뜻한 근대’의 모델을 이야기하려면 1)남자들의 가정에서의 참여, 2)일터에서의 근무 시간 스케줄의 유연한 조절, 그리고 3)‘케어/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영역을 논해야 한다.

14) 실제로 돌봄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보살핌의 윤리’에 대한 철학적 논의(Pateman, 1992; Frazer and Gordon, 1997; Kittay, 1999)나 ‘돌봄’의 교육학(Nel Noddings, 1992, 1995)에서부터 ‘사회적 돌봄의 제도화’(Mahon, 2001; Daly and Lewis, 2000; Ungerson, 1990; Graham, 1991)에 이르는 페미니스트들의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특히 북유럽 국가들을 연구해온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그 연구를 주도해왔다.

토텔레스 이후의 남성 중심적 정치학이 바뀌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키테이(Kittay 1999:113, 허라금 2006:137에서 재인용)는 정치적, 경제적 필요와 가치에 더하여 사회 정의의 제 3원리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의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그 원리의 실행은 “각자의 돌봄의 능력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연결망을 마련하고 그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돌봄의 개념이 사회생활의 필수원리임을 인정하게 될 때 아주 큰 사회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돌봄이 더 이상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로 인식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보상제도가 마련될 것이며, 돌봄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공동체적 해결방안이 실행될 것이며, 이는 주택 건설정책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봄 능력을 기르는 것은 교육의 중심 목표가 될 것이다. 이는 그간 남성 중심으로 규정되어온 ‘사회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 재규정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복지 정책은 북유럽이 초기에 시행한 복지 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태이다. ‘국가 안정망’을 마련한다는 구호 아래 체제에서 이탈한 자들을 관리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서 ‘복지’라는 말은 가난과 질병, 무능력과 실패의 대명사로 인지되고 있다. 한국은 노약자와 복지를 위한 공적비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군에 속한다(허라금 2006:128-129)는 점에서 일단 기초 생활자를 위한 복지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 지원이 ‘상호 돌봄의 체제’가 아닌 경비지원체제로 마련될 때, 돌봄 위기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될 길이 없다. 세계 최고 부자나라인 북유럽에서 이미 시행착오로 판단이 난 길을 따라 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적절한 정책을 세우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는다. 북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국가가 관장하던 제도적 복지의 틀을 ‘여성화’ 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가 공동체는 이제 관리적 개념을 내포한 시혜적 ‘복지’(welfare) 개념이 아닌 상호작용적인 ‘사회적 돌봄’(social care) 개념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면서, 평등(equity), 고용(employment), 그리고 국가 재정(fiscal policy)이라는 세 축의 어느 한쪽도 희생시키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Mahon, 2001:4). 실업과 탈가족화,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심각한 ‘돌봄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시장, 국가, 가족 영역의 재구조화를 꾀하면서 복지국가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할 것을 촉구해왔다(Mahon, 2001:1, 2002:3).¹⁵⁾

15) 마혼(Mahon, 2002: 3)은 돌봄의 위기를 1)탈산업고용체제로의 전환과 1인 생계부양자의 감소와 연결된 노동시장의 변화, 2)이혼율의 증가, 별거, 편부모 가족의 증가와 남성 부양자 가족 모델의 붕괴, 3)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연장과 출산 조절로 인한 인구 구성에서 찾고 있다. 데일리와 루이스(Daly and Lewis, 2000)도 비슷한 맥락을 강조하면서 미취학 아동을 가진 여성을 포함한 다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노인을 돌보는 일이 크게 늘어난 반면 그들을 돌볼 젊은 세대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인구 불균형 상황에 더하여, 재생산의 위기로 인해 증폭되는 생활세계의 파탄이 더욱 많은 돌봄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디자인’이란 ‘사회 보장’, ‘사회 보험’ 개념을 넘어선 ‘사회적 돌봄’의 개념화를 중심으로 사회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말로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별적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져 온 돌봄 노동을 사회화함과 동시에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어온 부성적(paternal) 복지 제도를 바꾸어내는 것, 그리고 남성들에게 주어진 생계 부양자라는 부담을 줄이고 그들로 하여금 ‘돌봄 사회’로 편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¹⁶⁾ 데일리(2000)와 루이스(1998, 2000)가 분류한 바의 네 개의 돌봄 영역을 보면 전통적인 가족/가정 영역,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 영역, 개인적 만족을 위한 개인 차원의 자원봉사 영역, 그리고 공공복지 영역이 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던 돌봄 영역은 점차 시장과 국가에 의해 잠식되거나 소멸되어 왔다. 오래전부터 국가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영역(state provision)과 독립적 영역(independent sector), 즉 시장과 자원봉사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온 노동은 지불과 미지불, 개인과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고, 이 일을 수행해온 이들은 주부들과 취업여성들을 포함한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은 20-40대까지는 ‘(어린 아이를 둔) 일하는 엄마’로서, 40-60대까지는 ‘(노부모를 돌봐야 하는) 일하는 딸’로서 돌봄 노동을 수행해왔으며, 늘 공식/비공식의 경계와 미지불/지불 노동의 경계에서 일해왔다. 이런 돌봄의 노동을 두고 데일리와 루이스(Daly and Lewis 1998:6), 후드(C. Hood 1992:3)는 ‘새로운 공공적 경영’(new public management)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더 나아가 그레함(Graham 1983: 16)은 사랑과 친밀성이라는 심리적 차원을 강조하면서 돌봄은 1)엄연한 노동이면서 2)의무와 책임을 강제하지 않는 감정적 관계를 포함하는 행위인데, 그간의 사회정책 연구가 이를 노동의 영역으로 축소시킨 반면 사회학적 연구들은 심리·문화적 차원으로 축소시켜왔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사실상 지불되는 노동이라 할지라도 돌봄의 행위에는 헌신(commitment)과 애정이 개입되는데, 모든 노동을 교환 가능한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에는 이런 돌봄 노동을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불/미지불, 공공/가정, 시장/자원봉사 등이 섞인 ‘혼합 경제’(mixed economy)를 둘러싼 개념화(Daly and Lewis 1988:14), 준-시장(quasi-market), 준-정부(quasi-government, quangos) 등 애매한 영역의 가시화(Evers et. al 1994)와 “경제적 보상을 주는 노동은 진정한 돌봄이 될 수 없다”는 식의 명제를 검토하는 것은 친밀성과 돌봄에 대한 본격적 탐구의 시작이면서 ‘비자본주의적’ 공간을 열어가는 시작이기도 하다(Hochschild 1995; Thomas 1993:57, Held 1993).

실제 선진 복지 국가의 흐름에서 흥미로운 점은 국가에서 독점하던 돌봄 영역이 개인들의 주도성이 강화되는 독립 영역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목소리보다 복지수혜자와 복지시혜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가나 시장이나 가족이나 식의 독점

16) Daly and Lewis, 1998; Mahon, 2001; Carol, 1993; Ungerson, 1990; Graham Hilary, 1991.

이 아닌 국가와 시장, 가족, 그리고 시민사회적 연결이 진행되는 다양한 돌봄 형태의 실험이 장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핀란드에서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국가 공무원이었던 간호사가 자신의 사업을 하게 되는 식이다. 핀란드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던 기존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소규모의 독자적 사업화를 권장하였는데, 이로 인해 돌봄 노동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¹⁷⁾ 국가에서 거국적으로 국민 복지를 다룰 때는 관료적 지식과 전문가적 지식에 의존하여 존엄성과 감정을 가진 통합적 존재의 차원을 무시하여 왔는데, 소규모의 독립적인 복지제공자 중심 체제는 그러한 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Daly and Lewis 1998:15). 따라서 최근의 연구 경향은 돌봄 주체자의 창의성 및 자발성, 수혜자 중심의 시각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돌봄 노동의 제도화는 단순히 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철학과 인간관을 바탕으로 새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며, 전체 사회의 제도화 자체에 질문을 던지고 사회를 재편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꾀할 때 어떤 텍스트를 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누가 이 작업을 수행할 주체들인가? 프레이저(Frazer, 2000)가 “가족 임금 이후: 탈산업 사회에 대한 기획”에서 ‘보편적 부양자 모델’과 ‘양육자 부응 모델’(the caregiver parity model)을 넘어선 ‘보편적 양육자 모델’(the universal caregiver model)을 제안한 바 있듯이, 부양자와 양육자 역할을 결합하여 수행해 온 많은 여성들의 삶의 방식이 주요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잉거슨(Ungerson 1990)은 그간 별도로 간주되고 진행되었던 육아를 위한 돌봄과 성인(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제안한 바 있다. 여성들의 저임금과 무급노동에 기생해 온 가부장적 국가와 기업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살인적 속도에 치어 사는 맞벌이 부부, 고립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비취업 주부, 돌봄을 위한 기본적 시간과 자원이 없는 빈곤층 모두가 일정하게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베푸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도구적 행위가 아니라 소통적 행위이자 관계 위주의 작업이며, “아래로부터의 공동체적 삶의 디자인”(design for community living)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격의 움직임이다.

개혁 정책을 실행할 때에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작은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간 나름대로 훌륭한 여성계 인력풀이 존재했음에도 불

17) 다음은 국가가 장악해온 돌봄 노동을 여성 개인들의 작은 기업으로 바꾸고 있는 핀란드 여성의 사례이다. “만일 당신이 끈기가 있고 장시간 일하는 것에 그리 부담감이 없으며,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나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이 일은 바로 내가 늘 원하던 그런 일입니다.”-노인과 어린 아이가 있는 장애자를 그들의 집에서 보살피는 일을 하는 여성. “나는 지방 정부에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으로 이 일을 해보니 참 새로운 경험입니다. 타성에 젖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구요.”-집에서 너싱홈을 운영하는 여성간호사(Leila Sinonen N Kovalainen, 229).

구하고 학계, 관료, 연구진 간에 시너지를 내지 못하였다는 여성계 내부의 자성의 소리가 일고 있다. 과도하게 ‘도구적인’ 남성 조직이 싫어서 잠재력이 큰 여성들이 기업·시장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가난한 인디 페미니스트로 지내려는 선택을 하는 현상도 현 국가의 여성정책의 표류현상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런 성향은 여성의 종속적 지위가 성별 분업, 특히 돌봄의 담당자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다는 페미니즘의 기본 인식과도 관계가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가진 ‘돌봄’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돌봄을 적극적으로 사고하는데 무의식적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간 페미니스트들이 국가에 대해 갖는 양가적인 감정과도 비슷한 것이었다. 페미니즘에서 국가는 남성 이익을 대변하는 억압적 지배기구로 보는 관점이 우세했고, 그런 관점에서 국가 정책에 기대할 것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 특히 시장이 압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 안에서, 그리고 돌봄의 전면적 파탄 상황에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보고, 국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국가를 일방적 권력행사를 하는 기구가 아니라 여러 행위주체들의 네트워크로 보면서 돌봄을 바탕으로 한 국가 형성에 참여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새로운 페미니스트 움직임으로 주목할 주체로 세 유형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90년대에 성장한 영 페미니스트 그룹과 지방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다양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그간 페미니스트로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적 영역에서 여성적 자질을 살려온 가부장제에 포섭되지 않은 여성들이다. 특히 지방 조직을 가진 여성의 전화, 여성 민우회,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 성폭력 상담소에서 어린이 기적 도서관에 이르는 여러 그룹들이 서울과 지역을 불문하고 삶을 위한 크고 작은 아지트들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지역성을 창출해내고 있다. 기형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빚겨나 글로벌 감수성을 키워온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온갖 뒤흔다꺼리를 하면서 다양한 역량을 키워온 ‘사회주부’¹⁸⁾들의 실천적 역량을 여성정책을 통해 제대로만 연결해낸다면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성 주류화’를 통한 사회개혁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복지를 ‘위로부터’의 해결 방식, 특히 수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어렵게 한다. 기존의 관료적 지식과 낙후된 전문성은 돌봄의 영역을 좁은 의미의 전문성으로 가두고 이를 축소·왜곡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는 돌봄 행위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확장하기보다는 전문가주의에 빠져 오히려 관계를 끊고 ‘차가운 근대’를 존속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다. 불안정한 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에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은 ‘세콤’(Secom)과 같은 전자기기의 설치로 가능한 일은

18) 페미니스트 지식생산 단체인 또하나의 문화에서는 동인지 6호 [주부, 그 막힘과 트임](1990)에서 ‘사회주부’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으며, 이 단어는 여성 운동 단체인 여성민우회 등을 통해 보편화되었다.

아니다. 전면적 사유의 전환과 체제 전환이 필요하며, 여기서 그 변화의 주체는 오래된 (남성) ‘국민’이 아닌 여성과 새로운 남성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¹⁹⁾ 그간 돌봄 노동을 담당해온 공동체적 감각이 살아 있는 여성들에 의해 사회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때 현 사회의 파행을 벗어날 해법이 찾아질 것이다. 후기 근대적 상황에서 국가 정책의 역점은 ‘도구적 합리성’의 국가를 ‘소통 합리성’의 국가로 바꾸어내는 것, 중앙집권식 권력체계를 지방분권화하고 여성들이 그 살림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는 그간의 ‘경제 합리적’ 인간관을 관계와 상호의존을 통한 인간관으로 바꾸어 사유해야 함을 뜻한다. 집중적 권력과 배제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쟁 사회로부터 포용과 소통의 원리가 주도하는 ‘따뜻한 근대’로의 방향 선회, 돌봄 노동의 회복은 사회 구성원들이 측은지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그런 면에서 측은지심을 가진 ‘아줌마’들이 대거 존재하는 한국 사회는 희망적이다. 비공식 영역에서 한국 사회를 돌보며 지탱해온 이들 ‘아줌마’들의 저력과 관심의 에너지가 어떻게 모아지는가가 돌봄 사회로의 전환의 관건이 될 것이다.²⁰⁾ 양육과 문화, 소프트웨어와 돌봄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성숙한 여성 국민/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동체적 삶을 기획해갈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바꾸어내는 것,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자녀와 부모를 위한 돌봄 노동을 하는 이들을 발굴해내고, 그들에게 ‘토건 체제’의 주체였던 남성이 독점해온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 이때 여성들이 만들어낼 지역의 공동체적 기획은 공동육아일 수도 있고, 작은 학교일 수도 있고, 노부모를 보살피기 위한 요양소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돌봄 노동을 해온 여성들이 따로 또는 연대하면서 별이게 될 크고 작은 지방분권적 ‘프로젝트’가 지속적 삶이 가능한 새로운 지역성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 프로젝트들은 ‘마을’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고용창출을 해냄으로써 새로운 ‘인간 존중 사회’(Sennet 2004)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식량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식욕이 문제가 되고 경제 생산이 중심이 되듯이, 애정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 관계성의 생산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일 것이다.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애정, 곧 관

19)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련해 양육을 ‘부담’으로 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여성부 장관의 신년사 메일에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이들에게 보육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문구를 읽었는데 이러한 언어 사용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

20)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아줌마’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동네에 노인/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앞장서서 막는 극단적 이기심을 보이는 이미지와 함께 지하철에서 남을 밀치고 자리를 잡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지만, 이와 상반되는 또 다른 아줌마 이미지가 있다. 이들은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이해심이 많고 포용적인 사람들이며, 촛불 시위에 자녀들과 함께 가는 건강한 상식인이자 포용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숙경씨는 중년 여성들과 [아줌마 내공 프로젝트], 웹사이트(<http://www.zooma.co.kr>)를 운영하고 있다.

계성과 돌봄의 결핍이 사회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 그간 돌봄의 개념화에 몰두해온 허락금의 표현대로 “우선의 정책적 과제는 ‘보살핌의 사회화’를 기초할 정당성의 지점을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참고 문헌>

권혁범

2004.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삼인.

김양희

2004. “정책의 성 인지적 혁신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접근”,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시범 사업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여성부 사회문화담당관실 자료집, 1-22쪽.

김영옥

2004. “여성정책의 새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시론”, 6-11쪽, [여성정책] 포럼 여름, 가을호. 12-15쪽, 한국 여성 개발원

김현미

2001. “글로벌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인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산과 ‘성별화된 계급’(engendered class)의 출현”, [진보 평론] 7호: 76-96쪽.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또하나의 문화 편

1990.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부”, [주부, 그 막힘과 트임],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세넷, 리차드

2004. [불평등 사회의 인간 존중], 유강은 옮김, 문예출판사.

이숙진

2002.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자활사업”, [한국 여성학] 18(2), 37-72쪽.

임지현, 이성시 편

2004.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장혜경

2005 [가족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조한 혜정

1999. “불균형 ‘발전’ 속의 주체 형성: 한국 근대화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남성 중심 공화국의 결혼 이야기 1, 2”,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1990. “가정과 사회는 여성의 힘으로 되살려질 것인가?”, [주부, 그 막힘과 트임],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최혜심

2004. “성폭행과 인터넷”, 주간 조선, 2004년 12월 23일자.

허라금

2005. “성 주류와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발전’에서 ‘보살핌’으로”, [한국 여성학] 21(1), 199-231쪽.

2006.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적 사유” [한국 여성학] 22(1) 115-145

홍성태

2005. “개발공사와 토건 국가: 개발독재와 고도 성장의 구조적 유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7호, 15-38쪽, 민주사회 정책 연구원, 한울.

히구치 게이코

2004. “개호 보험의 성과와 앞으로의 문제점”, [장기 노인 요양 보호에 관한 한일 비교], 일본 고령사회를 좋게 하는 여성의 모임과 한국여성개발원, 한국 사회 복지 법인 공생복지 재단 공동 주최 제9회 국제 사회복지 세미나 자료집, 15-25쪽.

Baden Sally and Anne M. Goetz,

1998. "Who needs 'sex' when you can have 'gender'?: Conflicting discourses on gender at Beijing", in Cecile Jackson and Ruth Pearson(eds.), *Feminist Visions of Development: Gender Analysis and Policy*. London: Routledge, pp.19-38.

Corner, L.

1999. "Strategies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capacity building for the gender mainstreaming", A paper presented at 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Oct. 26-29, Bangkok, Thailand.

Daly, Mary and Lewis, Jane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192), pp. 281-298, London: Routledge Journal.

Frazer, Nancy

2000. "After the Family Wage: a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 in Barbara Hobson(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London: Routledge.

1997. *Justice Interrupts? Critical Reflections i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New York: Routledge.

Graham, Hilary

1991. "The Concept of Caring in Feminist Research: the Case of Domestic Service", *Sociology* 25, pp. 61-78,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1983. "Caring: A Labour of Love" in J. Finch and D. Groves(eds.), *A Labour of Love: Women, Work and Caring*,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Held, Virginia
1993. *Feminist Morality: Transforming Culture, Society and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chschild, Arlie R.
1995. "The Culture of Politics: Traditional, Post-modern, Cold-modern and Warm-modern Ideals of Care", *Social Politics* 2(3), pp. 331-347.
2003. *The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rber, Linda
1990. "May All Our Citizens Be Soldiers and All Our Soldiers Citizens: The Ambiguities of Female Citizenship in the New Nation" in Jean B. Elshtain and Sheillla Tobias(eds.), *Women, Militarism and Savage War*, Rowman and Littlefield Press.
- Kittay, Eva Feder
1999. *Love's Labour*, New York: Routledge.
- Kwon, In Sook
2001. "The Gendering of the Connections between Nationalism, Militarism and Citizenship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3(1), pp. 26-54, London: Routledge.
- Lewis, Jane
1998.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Aldershot: Ashgate.
- Mahon, Rianne
2002.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Through the Lens of Child Care" Introduction, in Michel and Mahon(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New York: Routledge.
2001. "What Kind of 'Social Europe'? the Example of Child Care", A paper presented at the 1st IES Annual Colloquium, *Working Paper* no. 02/01. Also printed in *Social Politics* (2002) 9(4). Michel, Sonya and Mahon, Rianne.
2002.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New York: Routledge.

Moon, Sung Sook

2002. "The Production and Subversion of Hegemonic Masculinity: Reconfiguring Gender Hierarch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in Laural Kendall(ed.), *Under Construction: The Gendering Modernity, Class, and Consump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Unravelling Militarism: Gender Equality and a Controversy over Military Service Employment Benefits", A paper presented at the 1999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Conference. Boston.

Noddings, Nel

1995. "Teaching Themes of Care", *Phi Delta Kappan*, May, pp. 675- 679.
199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추병완, 박병춘, 황인표 옮김, [배려 교육론] 2002. 다른 우리)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n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es, Theresa

1999. "Mainstreaming Equality" in Watson, S. and Doyal, E.(eds.), *Engendering Social Polic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Simomen Leila and Kobalainen Anne.
1998. "Paradoxes of Social Care Restructuring: The Finnish Case" in Jane Lewis(ed.),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Ashgate. pp. 229-255.

Thomas, Carol

1993. "Deconstructing Concepts of Care", *Sociology* 27(4), pp. 649-670,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Ungerson, Clare

1990. *Gender and Caring: Work and Welfare in Britain and Scandinavia*,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83. "Why do Women Care?" in J. Finch and D. Groves(eds.), *A Labour of Love: Women, Work and Caring*,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